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7-학인-00022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 ○ ○

피 해 자 ○ ○ ○

피 신 청 인 ○ ○ ○ ○ 초등학교 교사 ○ ○ ○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위 학교 ○학년 ○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아 피해자의 회복조치가 지연되고, 2차 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으

므로, 해당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다. 피신청인 및 위 학교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타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라. 피신청인에 대한 탄원서 중 일부 탄원서에서 작성된 내용 및 작성 과정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부모에 대한 2차 피해를 주기에 충분하므로, 인권침해관련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폭력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하는 인권교육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 및 해당 반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추천하는 인권교육 강사에 의한 학부모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7. 6. 13.(화)

나. 신 청 인 : ○○○(피해자 母)

다. 피 해 자 : ○○○(○○○○초등학교 ○-○반)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교사

마. 구제신청 요지

2017. 5. 8.(월)경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사유로, 종아리, 허벅지, 허리, 팔 부위를 나무 매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체벌하였다.

2. 관련규정

[붙임 4] 와 같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붙임 1] 과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붙임 2] 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장, 관련 서류(학교폭력 관련 서류, 학교관리자 기록, 진단서 등)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5. 8.(월) ○학년 ○반 교실에서 4교시 수업 시작 무렵 욕설을 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은 지시봉으로 쓰는 4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 학생의 팔, 허벅지, 종아리 등을 가격하였고, 피해학생은 울었다.

2) 피신청인은 2017. 3.부터 현재까지, 급식지도시 줄을 안 서고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꿀밤을 몇 번 주거나, 때로 남학생들의 팔을 툭툭 건드리거나 했다.

3) 2017. 5. 8.(월) ○학년 ○반 교실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같은 달 18.(목) 피해자의 보호조치로 담임교체를 원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해 6. 2.(금) 최초 학교폭력 사안보고를 하고, 같은 해 6. 7.(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1호, 3호, 4호 조치¹⁾ 결정을 하였다.

4) 피신청인은 2017. 7. 31.(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같은달 5. ~ 12. 까지 학부모 54명이 작성·서명한 탄원서, 동료 교사 12명이 각자 작성한 탄원서, 총 13부를 제출하였다. 해당 탄원서 중 8부에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에 의해 1. 심리상담 및 조연,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조치 실시

‘피해자의 행동을 교정하고 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 의도는 인정이 되어야한다.’, ‘피신청인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워 학생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피해학생 부모님의 담임 교체요구, 과도한 중징계 및 형사 고발 요구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택에서 병가를 활용하여 자숙 중에 있으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판단

1)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는 ‘학

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생활규정 제21조에도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의 위 인정사실 1)항, 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 1)항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행위로 피해학생의 체벌 흔적(멍)을 살펴보았을 때, 다섯 부위의 체벌 흔적(왼쪽 종아리,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오른쪽 허벅지)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팔 부위의 체벌을 포함하면 최소 6대 이상을 때렸던 것으로 보이며, 체벌 당시 피신청인에게 맞고 몸을 움직이는 피해학생의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왼쪽 허리 부위를 때렸냐는 질문에 “해당 부위를 때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체벌을 하면서 어떤 부위를 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신청인이 흥분되어 있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어떤 부위를 때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흥분해 있던 상황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이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체벌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른 폭행이었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피신청인은 반의 다른 학생들의 머리부위에 꿀밤을 주거나, 나무매로 팔을 때리는 등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일상적으로 체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상태에서, 2017. 5. 8.(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이러한 폭행을 교실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다른 학생들 역시 폭력에 노출되었으므로 피해자들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체벌 또는 폭행 행위로 인해 학생들은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좌절감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에 의한 2차 피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는 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적절히 보호를 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중 교사에 의한 폭행 및 체벌을 인지한 학교에서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의 특성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가 심각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는 것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 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지속될 경우에는 분리 보호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 3)항은,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어서야 신청인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받은 날부터 20일이 되어서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017. 5. 22.(월)부터 같은 달 31.(수)까지 임시로 담임이 대체(교사 ○○○)되었고, 같은 해 6. 1.(목)부터 ○○○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교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체벌의 일상화, 체벌의 정도, 체벌로 인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2017. 6. 3.(토) 신청인이 제출한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는 “성인 남자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정서적 안정과 심리치료 병행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피해 관련 보호자의 주장에는 ‘자녀의 학급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찾은 담임교체에 불만이 큰 다른 학부모들이

연락을 하고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전화상으로 네 딸은 죽어도 괜찮다는 말까지 들었다', '너 때문에 ○○○ 선생님이 그만 두시고 다른 선생님이 담임으로 오셨다'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차 피해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회복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학교측의 학교폭력 처리 기간(발생일로부터 30일이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담임교사 대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가 위 인정사실 1), 2)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탄원서 내용 및 작성 과정에 의한 2차 피해

2017. 7. 31.(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 피신청인에 대한 [붙임 3]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피신청인에 대한 탄원서는 학부모들이 연명한 탄원서와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가 있다.

위 인정사실 4)항과 같이, 학부모들이 연명한 탄원서와 해당 학교에 같이 근무하며 탄원서를 작성한 동료 교사들 중 ○명의 탄원서의 내용은 피신청인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저희 자녀는 ○○○ 학생의 욕설사용 및 학습방해로 인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방해하는 행동이 빈번했기 때문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방해한 행동들이 여러번 반복’, ‘평소 수시로 욕설을 하던 ○○○ 학생으로 인해’, ‘그 학생의 욕설로 인해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 학생의 욕설사용과 학습방해로 인하여’ 등과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작성되는 과정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도록 조장한다고 보여진다.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며,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피해구제보다 가해교사의 구제에 동참하면서 피해학생을 고립시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를 가하고, 해당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탄원서 작성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4) 소결

위와 같은 판단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은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체벌하던 중, 2017. 5. 8.(월) 친구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40cm 가량의 나무매를 사용하여 원

쪽 종아리, 왼쪽 무릎,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오른쪽 허벅지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러한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되어서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았으며, 학교측에서는 폭력 발생 후 14일이 지나 피신청인의 분리조치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분리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속한 학교도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은 일차적으로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차적으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의 회복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민원처리 방식 및 절차를 중시하지 않은 임의적 처리 방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해교사에 대한 탄원서 중 일부 탄원서의 내용 및 탄원서가 작성되는 과정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교육공동체 안에서 피해자에 대해 비난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다수에 의한 2차 가해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체벌은 폭력이고,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문제에 대해 피해회복의 관점

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진행하여, 추후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를 회복하고 2차 피해 등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1.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오 동 선 (인)

[붙임 3]

피해 부위



1. 왼쪽 허벅지, 종아리



2. 오른쪽 허벅지



3. 왼쪽 허리

[붙임 4]

관련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

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붙임 3]

피해 부위



2. 왼쪽 허벅지, 종아리



2. 오른쪽 허벅지



3. 왼쪽 허리